

의원 입각 후보자... '동료애'에 맥빠진 청문회

김부겸·김영춘·도종환 검증 한국당 불참에 오전 파행도

국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세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공격이 예상됐으나 현직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인지 다소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예정이던 인사청문회에 전날 임명 강행에 반발, 불참했다. 이에 따라 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모두 정회 됐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 후 참석을 결정함에 따라 오후 2시부터 정상화됐다.

◇김부겸 후보자=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김부겸 행정자치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 모두가 김 후보자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 적임자"라며 평하는 등 호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따뜻한 형 같은 분"이라며 "정치적으로는 열정적이고 정의롭고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한 분"이라고 극찬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00년대 초반 기자로서 당시 조선의원인 후보자를 만나 인터뷰했다"며 "당시 수행비서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신 모습이 인상적이고 참신성과 혁명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내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행차부가 갖고 있는 많은 현안과 지방분권, 국민안전문제 등에 대해 성과를 내는 장관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영춘 후보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초 예상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한 입장



'차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정부장관-김부겸

황영철 "지역감정 극복 기대"

장제원 "지방분권 성과내길"

과 부산시장 출마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르는 등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5대 인사배제 원칙을 모두 어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며 "과거 정권 같으면 나이가 분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꼭 임명했어야 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이 취임해 (정부가) 출범하는 입장에서 홍 의원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 해수부장관-김영춘

황주홍 "부산시장 출마하나"

김 "해양수산 발전 전력투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다"며 "해양수산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다른 고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종환 후보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을 두고 공방이 있었다.

도 후보자는 진상조사위 설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약속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보수진영을 '갈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농단의 핵

■ 문체부장관-도종환

나경원 "새 블랙리스트 가능성"

도 "국정농단 책임소재 규명"

심 주범들은 감옥에 가 있지만, 조력자들은 벗어날 수 있다"며 "국정농단을 도운 공무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태로 문화부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후보자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균형을 명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또 다른 도종환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같은 당 이철규 의원 역시 "보수 정당에서 선거에 나온 예술인들을 열거하며 후원금 납부 목록까지 만들어 비판하고 있다"며 "새로운 블랙리스트"라고 각각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앙당 후원회 11년만에 부활

안행위소위 연 50억원 모금 의결...구정치 회귀 우려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한다면 진성당원을 다수 보유한 소수당의 자금줄도 솥통이 트일 수 있지만 과거 정치자금 관행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관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정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후원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시작은 2004년 일명 '오세훈법'이다. 기업 등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이 '차떼기' 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탄로 나면서 기업 등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탁금지 등을 골자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진성당원이 많은 소수당의 경우 후원회 모금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해 정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 국고보조금은 의석수 등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일수록 금액이 적어진다.

정당후원회 폐지는 기업과 정치 간 어두운 연결고리는 끊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혁신' 공감대...8월 전대

1박2일 워크숍 성료

국민의당이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동안의 워크숍에서 '혁신'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당은 강원도 국회연수원에서 현역의원들과 원외지역위원장들의 당의 현안과 혁신 방안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일단 전당대회는 오는 8월 내에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기 전당대회로 추진할 것인지 임시 전당대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도부에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세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질타도 있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국민의당은 혁신위

원회와 대선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혁신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당과 지역 조직을 모두 정비하는 것은 물론 당무와 재정 등의 혁신을 통해 당을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

난상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선 혁신위, 대선평가위, 사무처로 이관, 집행하기로 했으며 연정과 통합 문제 등 향후 좌표 설정 역시 혁신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보고, 공감대를 이루기로 결정했다.

워크숍에선 비(非) 호남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호남당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이 특강에서 국민의당의 미래를 위해선 호남과 개혁을 동시에 끌어안아야 한다면서 호남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일부 원외지역위원장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국민의당 "햇볕정책 대북정책 기조로"

6·15 앞 'DJ 정신계승' 다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4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하루 앞두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제3기 민주당부를 세웠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며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금강산 관광의 통로였던 강원도 일대를 돌려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최경환 의원도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심장부로 들어가 남북공동선언을 이끈 김 전 대통령의 결단과 신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남북의 화해·협력의 문을 다시 열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서훈 국정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이름을 거론, "당시 주역들이 다시 모

두 다 돌아왔다"면서 "17년 전으로 돌아 가면 남북관계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고성에서 의원 워크숍을 연 국민의당은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와 통일전망대를 차례로 방문,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열쇠가 햇볕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일전망대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튼튼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햇볕정책 3.0'을 가다듬어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

정운천, 바른정당 당대표 출마선언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14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바른정당은 '진정한 통합'을 위해 보수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분열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바른정당을 보수와 진보 진영을 뛰어넘어 실용·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요 현안별로 현역 의원 1명과 원외위원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개의 민생특위를 만들어 정책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 대표가 되면 소선거구제를 바른정당이 주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총 매입금액 : 11억원

▶1인 2,000만원 이상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